교육부, 李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교육세 투입 늘린다

공약 이행 위해 연간 3조원 예산 투입 예상
고특회계 연장 통한 교육세 전입 확대 추진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로의 교육세 전입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현장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육세 전입 확대, 대학의 자체 수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중심으로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육비를 투입해 학교의 수준을 올리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만원 정도인 데에 반해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비는 평균 2500만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가 목표한 대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고 고특회계의 교육세 전입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약 50%를 고특회계로 사용하는데 교육세에서 고특회계로 가져오는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로부터 가져오는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 통해서 (교육세 전입 확대) 비율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고특회계 연장과 교육세 전입 비율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상욱 전북대 교수회 회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대략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세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을 늘려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손영진 순천대 교수회 의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다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집중 투자가 국가중심대학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공약의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회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연구 중심 대학이 되게 하고 국가중심대학은 교육 중심이 돼 학부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 작은 대학은 기술 중심 대학으로 해 세 단계로 나눠서 지원해야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손 의장은 "(지원은) 국립대 연합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세 전입 확대를 공약 이행 방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올해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뉴시스

허위 게시글 쓴 30대, 벌금 3000만원

재판장 "국민적 추모 방해·기본적 공감 결여" 지적

지난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훼손한 30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틀간 자택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 댓글란에 '유가족 대표 진짜 유족 맞느냐, ○○당 권리당원이라던데', '모 정당 대표가 심어놓은 유족 대표는 왜 그 당만 안 왔냐고 소리치더라' 등의 허위 폄훼성 게시글을 작성,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A씨는 게시글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깎아 내리는 비속어와 함께 참사 유가족 대표가 해당 정당 소속 또는 당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있을 때, A씨는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며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거명하며 허위 사실로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엄벌이 마땅하다.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권철 기자

레이저 복합기로 5만원권 위폐 만든 20대 징역형 집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께 광주 모처에서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폐 20장을 출력·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례로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수법으로 색상, 크기가 5만원권과 유사한 이른바 '오만관'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과 은행 놀이를 하려고 가짜 돈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조지폐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사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씨가 만든 위폐 중 일부는 다른 누군가가 택시요금에 지급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로 인한 영향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현근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저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 "폐암 산재·저임금 대책 마련을"

정부에 급식 노동 위기·방학 무임금 등 해결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4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빠른 해결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학교 급식실 종사자 중 폐암 산재 피해자는 175명, 사망자는 13명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며 "이 순간에도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 해를 9개월 월급으로만 버티는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의 약속'이라며 1호 정책 협약으로 학교 급식 위기와 저임금 구조 해결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폐암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조선대 학생 59명, 240㎞ 국토순례 대장정

조선대~진도항~제주도 일대~진도항~나주~조선대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학생들이 240㎞ 국토순례에 나섰다.

24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교내에서 제20기 국토순례 출정식을 열고 10박11일간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순례는 7월4일까지 이어진다. 59명의 학생들은 조선대~진도항~제주도 일대~진도항~나주~조선대의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국토순례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탄소중립의 의미를 직접 체험한다.

김춘성 총장은 출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복귀"라며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가출 딸과 왜 어울려… 10대에 강요·보복협박 40대 '집유'

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 10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B(15)군이 가출한 자신의 딸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때릴 듯 시늉하며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로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한 딸을 2주 이상 찾던 중 B군 일행을 만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며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신고까지 하자 고소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침해 행위이자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군 측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B군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철수 기자